

# 한반도 위기속 대화론 고개… 北 도발위협 여전

문화상 등 대북특사 제안… 정부 “여건 조성돼야” 부정적

북한의 잇단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대화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통해안에 미사일 2기를 올리거나, 기습 발사 조짐을 보이는 등 도발 위협이 여전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 철학과 우선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미국 대통령과 만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신뢰회합한 외국 인사는 물론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문성근 전 최고위원 등 애원인사도 대북 특사로 제의하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경우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전례없는 위력 과시에 나섰던 미국도 조심스럽게 수위조절을 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성던의 한 고위관리는 4일(현지 시간) AFP 통신에 “미국에서는 B2와 F22, 구축함 출동과 같은 무력 과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기 지수를 낮추고 북한이 오판할 잠재적 위험상

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덜 요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치권의 특사파견 요구의 취지는 잘 알지만 파견은 계기와 상황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개성공단을 불모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안보다는 우선 북한의 행동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예정된 한미

독수리연습이 종료되고 북한도 내부 결속을 위기고조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부터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남북 양측간 전쟁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지수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자칫 생각지 못한 ‘무발적 사태’가 터질 경우 예측 불허의 정세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용한 통일대교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당사자인 7일 오후 군 차량과 일반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北, 무수단미사일 은닉 기습발사 조짐

靑 “북 10일 전후 도발 가능성… 철저 대비”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2기를 통해안으로 옮기고 난 뒤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에 실어 텁정시설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지난 5일 “북한이 이번 주 초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2기를 엘사를 이용해 통해안으로 옮기고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에 탑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미사일을 탑재한 2대의 차량을 텁정시설에 숨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첨보망에 노출되도록 미사일을 열차로 이동시키고 나서 미사일 탑재 차량을 숨긴 것은 “기습적으로 발사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미 외교부는 또 이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교 공관에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철수를 권고했다.

북한은 외교공관에 보낸 전화통지

레이더(SBX-1) 등을 동원해 강원도 원산지역을 포함한 통해안을 정밀 감시 중이다.

우리 군도 사거리 3천~4천km에 이르는 무수단 미사일의 기습 발사에 대비해 감시·탐지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외교부는 또 이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교 공관에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면서 철수를 권고했다.

북한은 외교공관에 보낸 전화통지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차례 소집한 상황평가 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전면 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국지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안보실장은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북한은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고 있다는데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자기들의 힘의 중심(重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차례 소집한 상황평가 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전면 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국지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안보실장은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북한은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고 있다는데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자기들의 힘의 중심(重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명단 유포에 “마녀사냥 우려”  
<북의 대남 선전사이트>

### 야권·광주전남시민단체

야권과 광주·전남시민단체 등은 5일 국제 해커톤조직 ‘에너너머스’가 해킹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계정 목록을 놓고 일부 누리꾼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종복불’ 충단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일부 당원이 회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로 맞서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이 색깔론 논쟁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정당국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

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 상황을 신(新)매카시즘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도 국정원이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해킹정보를 바탕으로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의 가입경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종복불” 충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국제 해커톤조직 ‘에너너머스’(Anonymous)라고 주장한 트위터 계정(@YourAnonNewsKR)에 ‘우리민족끼리’ 회원 계정 9001개가 공개됐다. 트위터 계정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성별 등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대거 공개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정부

#### 광주시의회 ‘탈핵 연구모임’ 세미나

광주시의회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총괄 책임이 참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총괄 책임이 참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 신민호 ‘순천 지역건설활성화 조례’ 발의

해야 한다는 업체의 책무도 담았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비 조달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행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최근 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 원전의 현주소 및 에너지 소비의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총괄 책임이 참석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

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 원전을 계획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김정훈(46·사진) 기획관이 지방고시 1기 출신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함께 준국장급인 투자유치지원관에 충전된 청탁과 부정한 행위를 조사해 “선진국은 원전을 폐